

송년특집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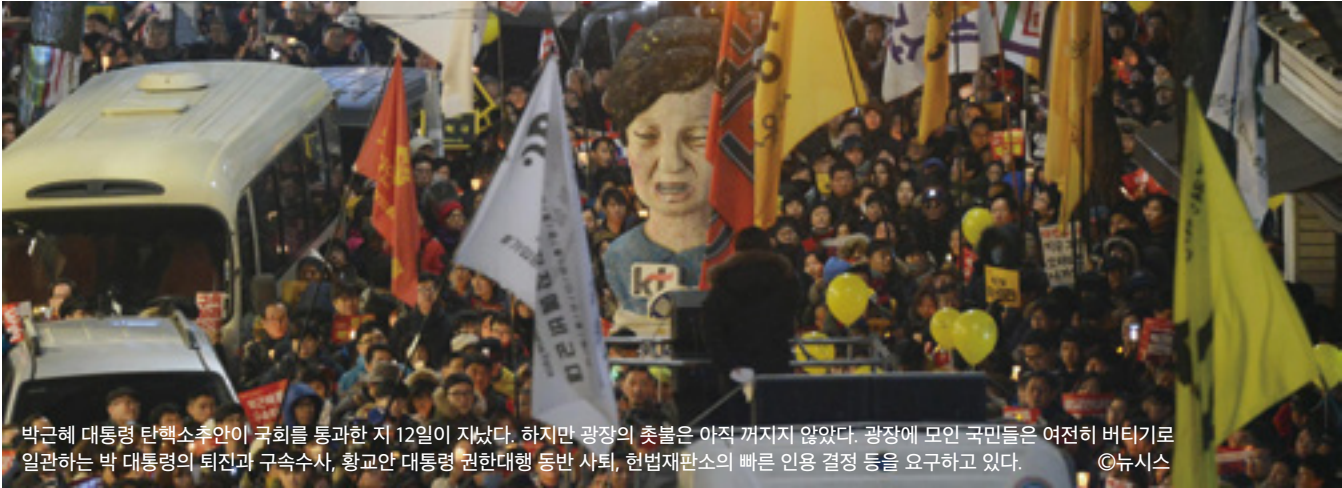
이슈로 보는 2016년 방송계

송년특집 ▶6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2016년

오피니언 ▶7면

[칼럼]공학회와 연합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이 지났다. 하지만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수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동반 사퇴, 헌법재판소의 빠른 인용 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스

“내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어렵다” 공감대 확산

미래부와 방통위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인정

2017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일정이 촉박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대다수는 “지상파 UHD 본방송에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2달여 후에 계획대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UHD 본방송을 차질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이 채택된 ATSC 3.0 표준 기반의 방송 송출·수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이에 맞춰 UHD TV를 적기에 출시해야 하며, 안테나 보급 등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지상파 UHD 방송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방송학회와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상파 UHD 본방송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수신 안테나의 TV 내장, 공시청 수신 설비 등 직접 수신 방안과 지상파-TV 제조사-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로 본방송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역시 “표준 결정 지연에 따른 UHD TV, 셋톱박스 등 시청 환경

준비 미비, 지상파 UHD 본방송 직접 수신 가구 극소수, UHD 방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실현 가능할지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기술 표준 및 시청 기반 확보 측면 △서비스 기반 확보 측면 △콘텐츠 제작 및 공급 측면 등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준비 전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주 교수는 먼저 “미국식 표준인 ATSC 3.0은 내년 1/4분기에 미국에서 표준이 완료될 예정으로 아직 보안 부문 표준이 미완성됐다”며 “만약 우리나라에서 본방송을 진행한 이후에 미국 표준이 바뀔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지난 8월 기술 표준의 미확정, 내장형 안테나 탑재 등의 문제로 지상파 UHD 본방송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ATSC 3.0의 UHD TV가 내년 2월쯤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UHD TV 수신기 보급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더해 이미 판매된 유럽식 표준의 UHD TV 컨버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돼도 이를 시청할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문행 수원대 교수도 “지상파 UHD 방송이 방송돼도 실제 방송

을 시청할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일부”라며 “지상파 UHD 방송의 수신율 저하는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한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공감을 표했다.

지상파 UHD 방송 소관 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김경기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과장은 “과거 컬러 TV 도입과 HD 도입 등이 다른 나라보다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 산업이 한 단계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방송 일정 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우선 방송사나 가전사 등에서 협력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 방송정책과 과장도 “당초 일정을 짤 때도 타이트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목표에 맞춰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며 “현재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할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정부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고집한다고 하는데 내년 2월이 아니라 2년이나 3년 후에 해도 우리가 세계 최초일 것”이라며 “타이틀에 집착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백선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지상파 UHD 방송’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 요청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본방송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2월 12일 “지상파 UHD 방송” 정부를 위한 것인가, 시청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초”라는 담론에만 매몰돼 무작정 일정 맞추기만 하지 말고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정책에 따르면 지상파 UHD 방송은 △2017년 2월 수도권 본방송

개시 △2017년 12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강원권(평창·강릉 등 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 본방송 개시 △2020년부터 전국 사군 지역 본방송 순차적 도입 △2021년 지상파 UHD 전국 방송 완료 △2027년 HD 방송 종료 추진 순으로 도입된다.

이를 놓고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올해 4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식 표준인 ATSC 3.0의 최종 승인이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표준 및 방송 시스템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며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도입이라는 담론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UHD 방송을 부실하게 시작하면 향후 더 큰 위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5월에 열린 ‘UHD TV 방송 도입과 지상파 서비스의 미래’ 토론회, 6월에 열린 ‘시청자 중심의 지상파 UHD 방송 수신 환경 조성’ 토론회, 10월에 열린 ‘지상파 UHD 방송,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11월에 열린 ‘온전한 지상파 UH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추진 사항 진단 및 정책적 제언’ 세미나, 오늘 열린 UHD 방송 정책 세미나까지 일 년 내내 정부 안대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합회는 “본방송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UHD 방송 제작과 송신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아직까지 UHD 방송과 관련된 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납

품된 장비 대부분도 완제품이 아닌 시제품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불안정한 제작 및 송신 환경 부분도 이번엔 처음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매년 언급됐었다.

연합회가 두 번째로 지적한 시청자 수신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된 문제다. 연합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4년부터 판매한 UHD TV는 유럽식인 DVB-T2 방식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지상파가 일정에 맞게 UHD 방송을 내보내도 볼 수 있는 시청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내장 안테나 장착 등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도 아직까지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우리는 이미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했던 정부의 성급한 정책 시행으로 직접수신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실패를 경험했다”며 “일정만 맞춰 엉망진창인 UHD 방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본방송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온 지상파 방송사가 본방송 일정 연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지상파 UHD 방송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연기함으로써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 왜 책임 회피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준비 안 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다”며 “(방송사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선휘 baek@kobeta.com

[공지] 방송기술저널 246호는 2017년 1월 11일에 발행됩니다.

OBS 재허가 고비 넘길 수 있을까?...또다시 재허가 보류 결정

방통위, 지역 MBC·지역 민방 등 33개 사업자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MBC와 민영방송 등 33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지만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OBS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OBS의 경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OBS에 대해서는 연말 최대주주 청문을 통해 경영 정상화 의지를 평가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C강원영동 등 33개 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OBS를 제외한 전체 방송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OBS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해 조건

부 허가 또는 불허 대상으로 구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OBS가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향후에도 경영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액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본금 확충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 시 최대액출자자의 지원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OBS는 지난 2013년에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하지 못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제출한 뒤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OBS는 2014년까지 50억 원 증자, 현금 보유액 87억 원 유지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증자된 금액은 10억5,000만 원에 그쳤고, 현금 보유액도 87억 원 미만으로 떨어져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방통위 내

부에서도 “OBS가 방만 경영으로 재허가 조건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과 같은 미디어업 체제로는 OBS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그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OBS는 개국 후 9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금 1,431억 원 가운데 약 97%를 잠식당했으며 개국 당시 415명이던 방송 인력은 현재 260명으로 이미 40% 가까이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는 임금의 12%를, 올해는 임금의 10% 이상을 반납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OBS의 위기에는 방통위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OBS 노사가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광고결합판매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에서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OBS는 앞선 데 댈친 격으로 노사 갈등마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OBS 노조는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사측은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사실상 방송 포기 선언에 다름없는 ‘비상경영안’을 발표함으로써 거의 모든 자체 제작물을 폐지하고 멸절한 방송 인력을 지역특공대라는 이름으로 과건 발령함으로써 방송국을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OBS 노조는 “매일 특검이며 국정조사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SWAT 파견으로 중계 스텝이 없어 뉴스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중계차는 회사 차고에만 서 있는 게 OBS의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한 뒤 “그럼에도 직원들은 스스로 쪽팔리지 않게, 조금이

는데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재판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가 납입전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소송에서 개별 SO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가입자당 190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내용은 190원은 현재 인터넷TV(IPTV)나 케이블 업계에서 내고 있는 280원보다 약 32% 낮은 금액이다.

또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도 2월 18일 SBS와 청주방송이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라도 더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인터넷 코덱을 짊어지고 현장으로 나간다. 제작비 지원이 없어 모니터 차량은 못 부르지만 스튜디오용 TV라도 광장에 들고 나가 OBS를 홍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사명감을 저버린 OBS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고, 자본 잠식과 자본율만을 핑계대며 더 이상의 투자를 외면하는 OBS 대주주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통위는 OBS가 내놓는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종편과 달리 OBS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당국과 OBS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OBS 경영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진행한 이번 재허가 심사는 지역 MBC, 지역 민방, 종교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라디오 방송 등 지역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로, 방통위는 “방송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경영 안정과 방안, 방송 사업 외 신규 사업 투자 시 수익성 조화 방안,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과 자율성 보장,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어 라디오 방송 등의 효율적 운영, 시청자 권의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역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재송신료 280원 적절”...지상파 손들어준 법원

“이전 계약에서 SBS와 MSO가 CPS 280원으로 계약한 부분 고려”

법원이 SBS와 지역 민영 방송사가 종합복수유선 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료(Cost Per Subscriber, CPS) 소송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3부는 12월 8일 SBS와 지역 민방이 MSO와 SO를 상대로 제기한 ‘공중 송신권 및 동시 중계 방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피소된 MSO와 SO는 CJ헬로비전 아라·충남·강원, 현대 HCN, 티브로드, CMB, 광주방송, 푸른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등이다.

법원은 2012년과 2013년에 SBS와 MSO가 CPS 280원에 계약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는 CPS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CPS 170~190원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

“공영은 ‘수신료’, 민영은 ‘광고’”

“현재 공영과 민영, 유료방송 등 매체별 재원 구조 차이 없어” 지적 나와

지상파방송이라는 모호한 체계가 아닌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라는 이원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영과 민영이 각자의 체계에 맞는 재원 구조를 갖고, 각기 다른 규제를 받아야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해의 지상파방송의 경영다각화 전략과 합의’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와 민영방송마저도 강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방송 규제가 공영과 민영이라는 이원적 질서로 정착돼 있다”며 “주문형 비디오(VOD)와 라이브 스트리밍 등이 증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민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심 교수의 주장에 공감했다. 이 전문위원은 “일본만 해도 지역 민방의 경우 모든 규제를 풀어줘 경영적으로 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상

파의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로 묶어 놓고 있다”며 “지상파라는 모호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을 꾀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면서 지상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상파에 많은 규제를 가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혁신을 하라고 주문한다”며 “지상파도 혁신을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올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광고 수입이 5:5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지상파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지상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분이 적다”며 “법·제도적 제약을 풀고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의 발제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 교수는 “현재 독일은 청소년 보호와 소비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시간과 광고 방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물론 수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민영방송에 대해선 광고 시간이 차등 적용되지만 광고 유형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중간 광고 역시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허용되고, 신유형 광고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앞서 12월 7일 열린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도 동일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천현숙 세명대 교수는 “매체 사용이 방송에서 인터넷·모바일로 옮겨 가고 있고, 뉴스를 보는 것만 해도 지상파·종편·인터넷·모바일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지만 모든 규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비대칭 규제를 풀어서 공정 경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현재 논란이 많은 중간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 광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광고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광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는데 왜 꼭 소비자들이 중간 광고에 거부

감을 느낄 것이냐는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일반 유료방송의 재원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수렴하고 있다”며 매체별 재원 구조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공영방송은 수신료 중심으로, 민영방송은 광고 중심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으로 재원 구조가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훈 계명대 교수 역시 “전진국일수록 수신료와 시청료의 비중이 높다. 광고만으로 전체 방송 산업을 견인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매체별 재원 구조의 차별만이 방송 산업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민영방송은 광고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상파, KBS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지상파의 신뢰도 하락이 다른 매체의 시청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 4개 부처에서 TF팀이 만들어져 비대칭 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지상파가 시청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SBS, 12월 15일 UHD 시험방송 시작

12월 17일부터 이틀간 쇼트트랙 월드컵 생중계

SBS가 ATSC 3.0 방식을 활용한 차세대 방송 초고화질(UHD)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ATSC 3.0 기술 기반으로는 세계 최초다. SBS는 12월 15일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해 국내 UHD 방송 표준에 부합하는 방송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SBS 목동사옥과 관악산 송신소에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방송 UHD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방송은 목동사옥 내 주조정실부터 IP 기반의 송출 시스템을 거쳐 관악산 송신소까지 전달된

방송 신호를 국내 가전사의 UHD 수상기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UHD 실험방송이 기술 검증 목적으로 테스트용 장비와 시스템으로 실시했다면 이번에는 본방송에 대비해 UHD 표준과 기술 기준이 적용된 실제 방송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SBS는 시험방송 개시 직후인 12월 17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초로 도입한 UHD 중계차를 활용해 강릉에서 개최된 ‘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UHD로 생중계 방송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방송기술용어

IFTTTIf This Then That

IFTTT는 ‘If This, Then That’의 약자로, 명령문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하면 그것을 한다’는 이름의 뜻 그대로 어떤 조건(Trigger)에서 특정한 행동(Action)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 일기 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Trigger) 푸시 알림 보내기

(Action)’, ‘회사에 도착하면(Trigger)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기(Action)’ 등이다. 조리법(Recipe)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문은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으며, 다양한 앱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무궁무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전승희 sh45@kobeta.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도 공범이다

“박근혜 퇴진” “언론 장악 분쇄”

언론노조, 새누리당사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 개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12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KBS 양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가짜 보수’ 새누리당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으며,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명 시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려 했으나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아직까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3당 간사들이 모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먼저 올리자고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새누리당은 언론을 장악하면 정권을 연장하기 쉽기 때문에, 또 정권을 잡은 뒤에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회 미방위를 ‘불량 상임위’로 만들면서 법안 상정을 반대해 왔다”며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청와대 언론장악방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가장 먼저 국회 미방위원들의 탄핵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총파업 출정식 직후 진행된 결의대회는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라’는 구호로 시작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장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니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최고 수뇌부의 비서실에서 고작 찌라시나 들춰보며 누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는지 들여다보고 찾아내서 처단하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라고 탄식했다. 이어 “언론을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것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라며 “첫걸음인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자”고 촉구했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에 다닌다고 하면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화가 난다. 저희 조합원들은 밤잠도 잘 자지 못 한다”고 토로한 뒤 “지금 MBC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와 같다”며 “박근혜의 지지율이 4%로 떨어졌는데 MBC의 시청률도 그렇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사장이 본

부장도 그 누구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본부장은 “우리는 얼마든지 부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양심,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의 편을 들기 위해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았다”며 “조금만 힘을 내면 국민을 위하고 시청자, 청취자, 독자를 위한 언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민병욱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지역신문협의회 의장)은 “경남에서 신문을 좀 보고 왔는데, 경남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반대에서 유보로, 찬성하는 의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내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역사적인 날의 전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내일 탄핵이 가결되는 것은 꼭 보고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자. 촛불과 시민들을 믿고 계속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의 목소리에도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야당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공영방송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새누리당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친박계를 대표했던 정우택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에 12월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언론 장악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언론 장악 방지, ‘구조 개선’과 ‘자기반성’ 함께 이뤄져야

야3당 의원·언론시민단체,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토론회 개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의 개선과 언론인의 자기반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야3당의 의원과 언론시민단체 4곳이 함께 주최한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토론회가 1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언론이 공권력에 장악되지 않고 주체성을 지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었다. KBS, MBC 등 방송사의 이사진 선출과 사장 선임이 청와대와 여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제도로는 제2, 제3의 언론 부역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지적됐던 사안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KBS 사장 선임 시 이사진의 과반이 아닌 2/3 또는 3/4 이상의 찬성을 적용하는 특별다수제 등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포함돼 있지만,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수영 KBS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여당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철 간사와 협상하겠다는 약속은 많이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가? 언제까지 협상

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댈 것이냐”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찬 MBC 보도민심위 간사 역시 청와대의 임금이 작용한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MBC 내부 구성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쫓겨난 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저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당전보로) 기자, 아나운서로 뽑힌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을 관리하고 협찬 영입을 하는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에게 얼마나 더 저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외부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 없이 내부의 저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심영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방송이라 하기 어려운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

이 (종합편성채널에서) 갈수록 늘고 지상파가 그것을 따라 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방송사 내부의 결정은 결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언론인의 자기반성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일본 NHK의 경우 구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세 정권과 밀착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하나가 통과되고 제도가 나아진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시민들이 지켜나갈 때 가장 강고할 것”이라며 “제도권의 영역을 넘어 국민적 소통 구조를 만들고 청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언론노조 “1차 발표에 이어 공정 보도 가로막은 책임자들 추가 발표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적폐 청산을 위해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 온 이들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제든지 또 다른 박근혜, 최순실이 출몰할 수 있다”며 “대

한민국의 헌정과 민주주의, 언론 자유 말살에 앞장선 자들의 이름과 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에 기록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역자 명단을 작성,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부역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청와대홍보수석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안광한 MBC 사장 △배석규 YTN 전 사장(현 케이블TV협회장) △박노환 연합뉴스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등 총 10명이다.

언론노조는 “오늘 발표한 명단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핵심 부역자들로, 이들에 대한 시급한 청산 없이는 언론 장악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의 인사 및 보도 개입 등 언론 장악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1차 발표에 이어 언론사 취재 및 보도 현장에서 ‘공정 보도’를 가로막은 보도 책임자, 실무자들을 취합, 선별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세월호, 사드, 역사 교과서, 노동개혁, 최순실 게이트 등의 보도에 있어 축소, 은폐, 몰타기 등 압력을 행사하거나 방해한 자들이 경영진 뒤에 숨지 못하도록 철저히 드러내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12월 14일 오후 7시부터 새누리당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언론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12월 1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의 입장 변경으로 해당 법안은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이에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앞 거리에 천

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알림으로써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KBS 새노조는 “KBS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무책임과 방해로 일관하며 법안 심사조차 못 하게 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앞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천막을 지키며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며 “천막 농성장은 쟁의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 있는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노숙 농성에 돌입한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방통위, 2015년 방송평가 결과 발표…지상파 3사 점수 하락 지상파 1위 KBS 1TV, 종편 1위 JTBC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평가’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KBS 1TV, 지역 민영 방송사는 TBC대구, 종합편성채널은 JTBC가 2014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매년 실시되는 방송 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 사업자, 35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방송평가위원회를 거쳐 방통위에서 의결한다. 이번에 공개된 방송 평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 실적이며, 지상파-라디오-이동식 멀티미디어방송(DMB)·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종편 등 매체별 특성에 따라 평가됐다.

우선 지상파는 KBS 1TV 85.12점, SBS 81.19점, MBC 80.83점, KBS 2TV 78.02점 순이었다. 지상파 3사의 방송 평가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특히 지상파 1위인 KBS 1TV의 경우 2013년 87.68점에서 2014년 86.59점, 2015년 85.12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EBS의 경우 자체 심의 항목과 수상 실적 등에

서 점수가 증가해 전년 대비 총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경우 간접광고(PPL) 고지 위반 등으로 방송 편성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과태료 처분 건수 증가로 점수가 하락했다”며 “자체 심의와 재난방송 등 일부 항목에서는 평가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PPL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자 일각에서는 PPL이 제작비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드라마의 흐름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결말 등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방송 평가에서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개 지역 민방의 평가는 TBC대구 91.08점, UBC울산 87.68점, TJB대전 87.32점, 강원G1 86.04점, JIBS제주 85.10점, JTV전주 84.65점, KBC광주 84.14점, CJB청주 84.13점, KNN부산 83.57점, OBS 82.57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보도로 이전과 다른 평가를 받

고 있는 종편의 경우 JTBC 81.48점, MBN 80.64점, TV조선 80.57점, 채널A 80.1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JTBC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TV조선이 이번에는 3위로,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MBN이 이번에는 2위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채널A의 경우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한 JTBC, TV조선, MBN과 달리 총 점수가 상승했지만 순위를 뒤바꾸지는 못했다.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YTN이 82.25점, 뉴스Y가 82.09점을 받았다. YTN의 경우 전년 83.89점에서 조금 하락했으며, 뉴스Y는 전년 81.16점에서 조금 상승해 둘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지상파 라디오 AM의 평가는 MBC 86.57점, KBS 1TV 85.22점, SBS 81.85점, KBS 2TV 79.12점으로 나타났다, FM은 MBC 87.57점, SBS 79.12점, KBS 1TV 77.62점, KBS 2TV 77.42점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DMB의 경우 지상파 계열은 KBS 80.99점, MBC 80.79점, SBS 80.36점이며, 비지상파 계열은 한국DMB 85.60점, 유원미디어 83.67점, YTN DMB 81.42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지상파 계열의 유원미디어는

DMB 전용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서는 CMB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총 점수가 하락했으며, 전체 평가 점수는 CMB 86.65점, HCN 86.28점, CJ헬로비전 84.94점, 티브로드 83.57점, 딜라이브 81.09점으로 나타났다.

위성방송 KTS카이라이프는 재무 건전성 항목에서 전년 대비 6점이 상승했으나, 방송법 준수 항목 10점과 콜센터 운영실적 항목 10점 등이 하락해 총점수가 전년 대비 21.07점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흡소핑 PP의 전체 평가 점수는 GS흡소핑 89.90점, CJ오쇼핑 88.46점, 현대흡소핑 86.95점, 흡앤쇼핑 83.98점, 우리흡소핑 83.96점, 엔에스쇼핑 83.95점, 아이디지텔 76.06점, KTH 72.23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한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체별로 만점 기준과 평가 항목은 상이하다. 지상파의 경우 TV는 900점, 라디오와 DMB는 500점 만점이며, 종편은 700점, SO와 위성방송은 550점, 흡소핑과 보도 PP 등 기타 매체는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공개했다 업계 의견 수렴해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3일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적용된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사의 방송 상품과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케이블 업계는 동등결합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통신과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

TV), 인터넷 전화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가입할 때보다 싸게 판매하는 결합 상품은 가입자 유치 효과가 높아 케이블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케이블 업계는 동등결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관련 고시에 거래 조건, 판매 방식, 전산 시스템 등 케이블 업계와 SK텔레콤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실질적인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동등결합 상품의 할인율은 현재 SK텔레콤 온가족플랜 결합상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온가족플랜 결합상품은 가족의 이동전화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동등결합 상품 역시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케이블에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율 등 거래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체 결합상품과 동등결합 상품의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상품의 결합과 동등결합의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기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고의 지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케이블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상품 제공을 요청토록 했으며,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

록 했다.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케이블과 SK텔레콤이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 관련 제도 운영과 시행 경과 등을 비교·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 등 6개 케이블 사업자는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정)’ 출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동등결합 상품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한국 상륙 12월 15일부터 월 2.99달러에 이용 가능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불리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가 국내 진출을 선언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넷플릭스의 전철을 밟을지,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넷플릭스를 뛰어넘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마존 오리지널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자 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마존은 12월 14일(현지시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를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아마존닷컴이 단골 고객 유치용으로 만든 멤버십 서비스였다. 아마존은 연회비 99달러(약 11만 원) 아마존 프라임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난 4월

개별 상품으로 출시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물론 전 세계 3,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중 처음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해 다운로드 서비스 부분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른 업체보다 앞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12월 15일부터 안드로이드나 iOS 기기,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 삼성전자인 LG전자의 스마트 TV 또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7일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2.99 달러(약 3,5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월 5.99달러(약 7,000원)를 내야 한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용자들은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인 〈더 그랜드 투어〉, 〈더 맨 인 더 하이 캐슬〉, 〈트랜스퍼러런트〉, 〈모짜르트 인 더 정글〉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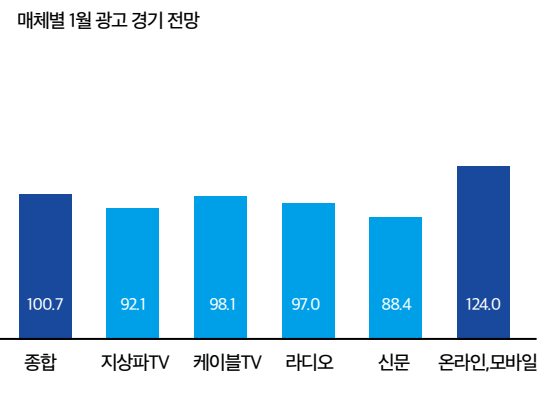
즈는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지만 오리지널 시리즈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영어를 기본으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의 자막과 더빙만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 넷플릭스와 비교하며 꺾메기뿐인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아마존은 회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출 수 있도록 스트리밍 화질을 3단계로 제공한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측은 “아마존의 최신 비디오 압축 기술을 활용해 화질은 유지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며 “자동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의 기기, 이용 위치, 인터넷 속도 등에 따라 알맞은 화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2017년 1월 광고비, 전월수준 소폭 상승 ‘전통미디어 대비 뉴미디어 강세’, ‘대형 광고주 광고비 상승 기대 어려워’



내년 1월 광고비 집행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국내 광고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는 ‘광고 경기 예측 지수(Korea Advertising Index, KAI)’에 따르면 2017년 1월 종합 KAI는 100.7로 2016년 12월 광고비 집행과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 92.1, 케이블TV 98.1, 라디오 97.0, 신문 88.4, 온라인·모바일 124.0으로 조사돼 온라인과 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매체의 광고비 집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및 보건의약품(142.9), 여행 및

레저(142.1), 컴퓨터 및 정보통신(IT)(120.0) 업종의 강세가 예상된다. 지상파TV 광고비 집행을 늘릴 것으로 응답한 업종은 제약 및 의료(113.3), 가정용품(110.0), 서비스(109.5) 업종이고, 라디오에서는 식품(112.5), 수송기기(111.1) 업종이 광고비 집행을 늘릴 것이라도 답했다.

온라인·모바일 매체는 가정용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광고비 집행이 유사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행 및 레저(163.2), 유통(162.5), 가정용품(150.0), 서비스(142.9) 업종에서 광고비를 늘릴 것으로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월에는 대형 광고주의 광고비 감소(66.7)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형 광고주(101.4)와 소형 광고주(105.2)의 광고비는 전월 대비 유사할 것으로 조사됐다.

코바코는 “대형 광고주는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제외한 전 매체에서 전반적인 광고비 집행 감소가 예상되고, 중형 광고주와 소형 광고주 모두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위주로 광고비를 집행할 것으로 응답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광고주의 광고비 상승 기대가 어려워 시장의 활기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서진 sejin@kobeta.com

SBS 대표이사 사장에 박정훈 내정…‘그것이 알고 싶다’ 출신 PD 미래전략실과 경영지원본부를 ‘경영본부’로 통합

SBS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박정훈 단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SBS는 12월 8일 현행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단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제작·편성 부문을 총괄해온 박정훈 대표이사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생명의 기적)>〈환경의 역습〉등을 연출한 PD 출신으로 한국방송대상, 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SBS에서는 예능국장, 편성실장, 드라마본부장, 제작본부장, 부사장을 역임했다.

SBS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먼저 미래전략실과 경영지원본부를 ‘경영본부’로 통합하고, ‘5본부 5실·센터 4국 70팀·부·EP·CP’체제를 ‘5본부 4실·센터 3국 69팀·부·EP·CP’ 체제로 개편했다.

SBS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도 부문의 공정 방송을 담보하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며 “미래의 방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조직을 보다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소비자 10명 중 8명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 필요” 응답자 86.9% “안테나 내장형 UHD TV 구매 의사 있어”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실시와 관련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안테나 내장형 UHD TV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UHD KOREA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만69세 성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안테나 내장형 UHD TV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안테나 내장형 UHD TV 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에게 ‘구매 의향’을 질문한

결과 86.9%가 안테나 내장형 UHD TV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13.1%(전혀 없다 0.6%, 없는 편이다 12.5%)에 그쳤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가전사가 추가 비용, 디자인,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UHD TV에 안테나를 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82.8%가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이슈로 보는 2016년 방송계

1. 지상파 UHD 표준, 북미식 ATSC 3.0으로 확정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 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9월 30일자로 확정·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25일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북미식 ATSC 3.0으로 결정하고 9월 23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가졌다. ATSC 3.0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유럽식 DVB-T2 방식과 비교·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협의회는 "북미식 ATSC 3.0이 기술적·경제적·방송 서비스 측면에서 유럽식 DVB-T2보다 우위에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에는 ATSC 3.0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한 것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 4개 방송국(KBS 제1UHDTV방송국, KBS 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SBS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는 7월 4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ATSC 3.0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ATSC 3.0이 지상파 UHD 방송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학계 등의 참석자들도 ATSC 3.0의 기술적·경제적 우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2.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7월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쟁 제한성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원회의에서도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 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에 합병 계약을 신고할 당시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며 "다만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 정도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공정위가 심사전담TF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나도 고강도의 조치가 포함될 것", "최악의 경우 불허" 등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았고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불허'로 결론이 났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도 공범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으로 확산되면서 언론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JTBC가 태블릿 PC를 인수해 단독 보도함으로써 확산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영방송에 대한 실망감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곳곳에서는 '니들도 공범', '각성하라', '너희가 기자냐' 등의 글귀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뼈아픈 반성의 목

소리가 나왔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탄식은 KBS 총과업, 언론노조 결의대회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KBS 양대 노동조합은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총과업 출정식을 갖고 "'KBS는 공영방송인가? KBS는 국민의 방송인가?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국민들이 무겁게 묻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KBS 양대노조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총과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인원 대비 약 8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총과업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촛불의 바다에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KBS는,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뼈아픈 질타를, 무거운 비판을 그리고 냉정한 외면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싶지만 공영방송 KBS가 존재의 기로에서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이라고 자백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총과업을 잠정 중단한 뒤 12월 1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또다시 안갯속으로

2016년은 공영방송 '수난의 해'로 기억될 듯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창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로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력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의 민낯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명은 7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제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야당은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KBS 등 공영방송으로 확대되면서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 없이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친박계를 대표했던 정우택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논의 불가'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5. 첫날은 '파행' 끝날은 '빈손'?..20대 미방위 최악의 국회 되나?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시작은 전문성 논란이었다.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추혜선 의원은 상임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15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당시 야당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13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추 의원의 미방위 배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정은 개인의 전문성이나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의원이 100% 만족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추 의원의 상임위 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추 의원은 미방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활동하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의사를 밝히면서 상임위 조정이 이뤄졌다.

추 의원의 상임위 조정 문제는 정리됐지만 미방위의 첫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미방위 국감은 9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해 미방위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미방위의 수난은 국감 파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고 올해 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미방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 불렸던 제19대 국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특별위원회 2곳과 운영위원회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6.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 필요해" 공감 확산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이 촉박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 학계 심지어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2월 12일 "지상파 UHD 방송" 정부를 위한 것인가, 시청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초"라는 담론에만 매몰돼 무작정 일정 맞추기만 하지 말고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본방송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UHD 방송 제작과 송신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아직까지 UHD 방송과 관련된 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납품된 장비 대부분도 완제품이 아닌 시제품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만 맞춰 영망진창인 UHD 방송을 시작할지 아니면 본방송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와 학계,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상시 고용 증명 서류(취재 및 편집 인력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너무 쉬운 인터넷 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 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치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근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문체부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어뷰징 문제와 유사 언론 문제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언론이 아닌 대부분 중대형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며 "대안 언론이나 1인 미디어 등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대부분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적 보도나 어뷰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을 강행

했고 결국 인터넷 신문 운영 개인사업자와 임원, 기자, 독자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8. 방통위, 있으나 마나 한 '재송신 가이드라인' 발표

미래부와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 협상 의무 위반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 요구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부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재송신 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인 지상파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출범한 것부터 시작해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 광고? 완성도 높은 방송 위해선 OK

광고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간접 광고는 물론이고 중간 광고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위해선 다소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고를 대하는 시청자들의 태도가 매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 광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약 35:65로 나타났다. 또 중간 광고의 수익이 어린이, 교양,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공익적인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진다면 중간 광고 도입에 찬성하겠다는 비율은 57.2%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선 광고로 발생하는 시청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물론 반대가 여전히 많지만 과거 조사에서 90% 이상 반대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중간 광고를 비롯한 광고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 광고에 대한 논의는 20년 전부터 이뤄졌는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며 "학계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과거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도 이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10. '찾잔 속 태풍'에 그친 넷플릭스? 지금부터 시작?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가 1월 7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찾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넷플릭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콘텐츠로 국내 적응에 실패했다. 한 달 무료라는 과격적인 서비스도 제공했으나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서비스 중인 국내 드라마 대부분이 몇 년 전에 방영한 것들이고, 서비스 초기에는 자체 콘텐츠도 거의 없었다. 내년부터는 딜라이브와 손잡고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전략이지만 대체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년 특집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2016년



KOB 2016 개막



월드미디어포럼 2016 개최



KOC 2016 개최

▶ 제24-25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취임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7월 22일 오후 7시 서울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제24·25대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각경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박병렬 KBS 제작기술본부장, 김순기 KBS 네트워크센터장, 이경범 CBS 디지털기술국장, 안덕상 연합회 초대회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4대 이후삼 연합회장으로부터 연합회기를 전달받은 박종석 신임 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제 방송융합의 시대를 지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재창조되는 영역 파괴,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방송기술인들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방송기술인들이 미래 미디어 산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송과 IT의 융합 △실감방송의 영역 확대 △지상파 UHD 본방송을 통한 UHD 산업 활성화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KOB 2016 개막, 미래 방송기술이 한자리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엔엑스가 공동 주최하는 제26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Lighting Equipment Show, KOB 2016)가 ‘방송, 감성을 연결하다(Broadcasting, Touching your Emotio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KBS·MBC·SBS·EBS·OBS·CBS·아리랑국제방송·tbs 등 방송사, 한국음향학회,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KOB 2016는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 유럽의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IBC)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엑스 전시장 A, C, D홀에서 총 27,997 sqm 규모로 진행됐으며, 국내 제조사 189개사를 포함해 전 세계 28개국 1,017개사가 참가해 차세대 방송 서비스와 영상, 음향, 조명 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KOB 역사와 함께 해온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Beyond Definition △Smart Media △Future Media △Audio&Lighting in future △VR&Dron △Pre-

Engineer 등 6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특히 ‘아시아 미디어 서밋(Asia Media Summit)’ 참가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미디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월드미디어포럼 2016 개최

제2회 월드미디어포럼(WMF)이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미디어 특이점이 온다(The Media Singularity is near)’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WMF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 포럼으로 지난해부터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 첫날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분야의 전문가인 장병탁 서울대 교수를 모셔 AI의 등장이 미디어 산업의 특이점이 될 것인지 또한 AI가 현재 미디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살펴봤으며, 이외에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제품 솔루션 총괄을 맡고 있는 ‘마크 레프코비츠’와 프랑스·독일 협력 공영방송인 ARTE에서 가상현실(VR)을 연구하고 있는 ‘케이 메세버그’ 등 글로벌 미디어 전문가 3명이 강사로 나섰다.

▶ KOC 2016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방송기술교육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컨퍼런스 ‘KOC 2016’이 10월 2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KOC 2016은 전 세계 화두(話頭)인 4차 산업혁명이 미디어 산업에 몰고 올 변화를 예측하고 재편되는 산업 패러다임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벤처 1세대’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모두의 예측대로 AI가 사람들의 일 자리를 빼앗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창조적인 인재들이 양성되는 기회가 될 것인지 또 미디어 산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며, 국내 빅 데이터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데이터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빅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외에 Beyond the Intelligence 세션에서는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과 트레저헌터의 박진우 이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Beyond the Technology 세션은 김나래 아나운서의 사회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오컬러스 공동창업자인 서동일 볼레 크리에이티브 대표와 한국판 포켓몬고 ‘크레용팡’을 만든 아이아라 최우철 대표 그리고 VR 콘텐츠 제작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김창배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장이 강연자 겸 토론자로 참여했다.

▶ 2016 방송기술대상 및 송년회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가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병국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원장, 박상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부회장, 신영식 한국이엔엑스 전무 등 내·외빈 인사와 약 250여 명의 방송기술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상의 영예는 최영학 CBS 기술연구소장이 차지했다. 연합회는 “최 소장이 차세대 오디오 파일 시스템과 송신소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함으로써 제작 환경과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라디오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라디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라디오 관련 아이템으로 방송기술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패는 연합회 산하 단체인 방송기술교육원의 파트너로 미래방송기술창의인력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RAPA 이병국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원장이 받았다.

이날은 대상과 감사패 이외에도 △특별상(KBS 박승우) 총 1명 △최우수상(SBS 김상진, MBC 노민철, KBS 전성호) 총 3명 △우수상(SBS 정의준, MBC 스마트특수영상제작팀, EBS 이흥식, KNN 이종록, YTN 신동훈) 총 5명 △장려상(OBS 원태희, tbs 김동식, 아리랑국제방송 주조정실) 총 3팀 등 총 12팀에 방송기술 및 방송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를 인정하고 포상했다.

지난 1988년 제정된 방송기술대상은 해마다 실시되는 행사로 국내 방송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수여되는 방송기술 분야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 전미방송협회(NAB)와 MOU 체결

NAB 2016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송사와 기업 등을 방문해 UHD 발전 현황을 확인한 뒤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합회와 NAB는 향후 UHD 발전에 있어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방송 기술 정보 교류 △각 기관 주최 연례국제회의의 연사 교류 및 기술적 협력 후원 △공동 연구 프로젝트 실시 △방송의 미래 전략 공유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기술교육원, RAPA와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 교육사업 협약 체결

방송기술교육원은 4월 14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직군별 특성과 교육 중 하나인 지상파 방송기술인 교육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후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토론회를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식 표준인 ATSC 3.0의 최종 승인이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표준 및 방송 시스템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며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도입이라는 담론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UHD 방송을 부실하게 시작하면 향후 더 큰 위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를 제안했다.

▶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방송기술인상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3월 17일, 6월 23일, 9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연합회 회의실에서 각각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분기별 수여되는 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 홈페이지 리뉴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월간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저널 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났다. 연합회는 지난 4월 연합회 사업과 공지사항, 방송과기술 기사, 저널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회원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전미방송협회(NAB)와 MOU 체결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 후원



2016 방송기술대상 및 송년회 개최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학회와 연합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칼럼



호요성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장

올 12월말이면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회장으로서의 나의 임기가 끝난다. 예전에 학회 임원으로 활동할 때는 내가 맡은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학회 전체 사정을 살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1년간 회장직을 맡아 학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니 앞으로 고치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개인별로 학회 활동을 하는 목적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학술 교류에 주안점을 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워크숍이나 논문 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열리는 수많은 행사에 모두 참석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주제의 세미나에 종종 참가해 최근에 진행되는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할 좋은 주제도 찾아야 한다. 최근 같이 작업할 연구원이나 학생이 줄어들어 연구하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은데, 항상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춰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연구 논문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학회 임원을 맡아 봉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들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학술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대개는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일부 회원들에게는 약간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학문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런 학술 행사에서 본인이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체면을 따지거나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학술 행사는 외국 전문가를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구축할 수도 있다. 우리끼리의 작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시야가 좁고 사고가 편협한 방 안통수형 존재가 아닌지 가끔 점검해 보고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KOB와 같은 대형 행사를 서로 돕고 학술 세미나에 관한 정보를 양쪽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 1년간 학회를 맡아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학회의 살림살이였다.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수많은 학술 행사가 난립하면서 행사 수익도 제한돼 근래 3년 연속 학회 재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학회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학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고, 결국 국제 학술 행사의 유치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또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KOB와 같은 대형 행사를 서로 돕고 학술 세미나에 관한 정보를 양쪽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MPEG 포럼과 MOU를 체결해 표준 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최해 향후에도 매년 학회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었다.

물론 학회 워크숍이나 학술 행사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회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지출 경비를 최대한 아껴서 학회 살림을 알차고 실속있게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종종 단체 비용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착각하고 물 쓰듯 평평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학회 돈은 항상 용도와 상황에 맞추어 너무 인색하지 않게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행사 후 남은 수익금을 마치고 혼자서 다 번 것처럼 따져가며 이를 뒤집기로 탕진하려는 풍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학회에서는 올해 다른 해와는 다르게 2번의 국제 학술 행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1월에는 부산에서 IWAIT 2016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180명 정도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12월에는 제주에서 APSIPA ASC 2016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해 IEEE Fellow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다수의 석학들을 포함해 3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국제 학술 행사를 통해 학회 회원들이 저명한 외국 전문가들을 만나 좋은 정보를 직접 접할 기회를 가졌으며, 학회의 위상도 한층 높이고 학회 재정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올해 학회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했지만, 회장으로서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바쁘고 힘들 때는 이리 뺄뚱 저리 뺄뚱 다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숨죽이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잔치상이 모두 차려진 뒤에 젓가락만 들고 나타나 실속만 차리는 양제족도 있고, 학회 행사인데도 먼 산 바라보듯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초월형도 인도 있는 것 같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 맞다면 같이 일하는 재미도 있고 일이 훨씬 더 쉬워질 텐데, 너무 자리만 욕심내어 차지하지 말고 자기가 다른 사정으로 학회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양보해 다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과감한 용기와 미덕도 겸비하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근시적인 관점에서 눈앞의 일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알뜰한 계산보다는 학회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성심껏 봉사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학회는 분명 앞으로 성대히 발전할 것이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사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기를 바라는 참으로 웃픈(?) 상황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기를 바라는 형국, 현재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의 추진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본방송 일정대로라면 앞으로 두 달여 정도가 남아있다. 각계에서는 성공적인 본방송 서비스를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성공적 결과를 위해서는 정부, 방송사, 가전사 등 각계의 긴밀한 협조 및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것도 '세계 최초'라는 영예를 위해서는.

각 지상파방송 4사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고 있는 실정이다. 두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방송사에서는 송신기를 공수해 송신소로 올리기도 하고, 막바지 헤드엔드 시스템 테스트, UHD 주조정실 시설, UHD 중계차 시설 등 기술 부문에서는 거의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마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방송사 얘기지 이보다도 진행 속도가 늦은 곳도 있는 듯하다.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은 지난 12월 15일 SBS에서는 4K 중계차를 이용한 '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생중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지상파 UHD 전송 방식이 결정된 이후, 방송 장비 개발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보니 장비 조달 문제가 원활하지 못 하다. 사실상 세계 최초의 전송 방식 구현이다 보니 전송의 핵심 시설인 송신기 및 헤드엔드 시설의 정합 또한 충분히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본방송 개시 데드라인에 맞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가까스로 흥내만 내는 것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이긴 하지만, 가전사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가전사 나름의 시간 로드맵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의 수송기를 보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면피성 답변으로 보인다. 통상 가전제품의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는 테스트 단계만도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내년 2월 본방송을 개시한다고 대다수 시청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2월에 매장으로 달려가 수송기를 대규모로 사지도 않을 것이다. 기한에 가까스로 맞춰 시제품 수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친 완전한 수송기를 보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직접 수신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안테나 내장 문제, 콘텐츠 보호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이 절박하고 중대한 사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도입'이라는 담론에 가려 물리적인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UHD 방송을 부실하게 시작하면 향후 더 큰 위험 비용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방송사와 가전사는 정부와 약속한 일정에 맞추지 못할 것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정부는 실적 내기에 급급해 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제는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각계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년 2월에는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 것인지 등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황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과 유사해 참으로 웃픈(?) 상황이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성명서] '지상파 UHD 방송' 정부를 위한 것인가, 시청자를 위한 것인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으로 UHD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개발도 완료되지 않아 불완전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부실한 기술로 국가 브랜드를 훼손할까 우려된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정부의,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지상파 UHD 방송이 아닌 '시청자의,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에 의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자 한다.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조정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본방송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UHD 방송 제작과 송신 환경이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직까지 UHD 방송과 관련된 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한다. 그 외에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UHD 방송 장비 대부분이 완제품이 아닌 시제품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송신 시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상파 3사는 올해 말까지 약 8개의 송신소를 구축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ATSC 3.0 표준 확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제품 출시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지상파가 일정에 맞게 UHD 방송을 내보내도 문제다. 당장 지상파 UHD 본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4년부터 판매한 UHD TV에는 유럽식인 DVB-T2 방식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기존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없다. 이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가전사에서 신규 모델을 출시할 때는 테스트만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이 지난 7월 말이나 겨우 확정돼 내년 2월이라는 본방송 일정까지 신규 모델 출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장 안테나 장착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 보편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선 수신 환경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내장 안테나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장 안테나 장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UHD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을 위한 전

원 케이블 장착형 안테나, 초박형 내장 안테나, 금속 로고형 안테나 등 3종을 개발해 UHD 수신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가전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역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UHD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방송사는 가전사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다. UHD 본방송을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막대한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상파 UHD 정책 방안에 따르면 UHD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상파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콘텐츠 제작비에 UHD 장비 수급 부분까지 더해져 하는데 광고 수익은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進退兩難)인 셈이다.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했던 정부의 성급한 정책 시행으로 직접수신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라는 담론에만 매몰돼 무작정 일정 맞추기만 하지 말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 시청자들을 위한 지상파 UHD 방송을 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 일정한 맞춰 엉망진창인 UHD 방송을 시작할지 아니면 본방송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지는 온전히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6년 12월 12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A 2017
www.kobashow.com



27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